

‘중산층 강국 재건, 국민통합’ - 2013년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 분석

이진복(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연두교서의 메시지는 중산층강국 재건을 통한 국민통합. 초당적 문제해결의 정치를 통한 중산층 중심 동반성장, 중산층의 상식 복원임. 중산층강국 재건을 위한 정책방향은 제조업·에너지·기반시설·주택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육·고등학교·대학의 기회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개혁, 이민법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근로에 대한 보상임. 오바마의 연두교서는 2012년 대선 승리의 메시지인 ‘중산층의 상식’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과 ‘공정성’의 중산층 스토리를 다시 확인하고 있음. 또한 야당시절부터 일관되었던 ‘타협의 정치’를 강조함

I.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

1. 중산층강국

○ 중산층 중심 동반성장

-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경제성장의 진정한 엔진’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이 아닌 ‘좋은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장’이 국정과제가 되어야함을 강조

- “상승하고 번영하는 중산층, 미국의 경제성장의 진정한 엔진을 재점화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과제이다.”
- “더 강한 가정, 더 강한 공동체, 더 강한 미국, 이는 언제나 국내에서 우리의 진보의 근원이었던 번영하는 중산층에 기반한 광범하고 공유된 번영이다. 이는 또한 전세계에서 우리의 힘과 영향력의 토대이다.”
- “재정적자 감축은 단독으로 경제정책이 될 수 없다. 좋은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장은 우리의 노력을 지도하는 북극성이 되어야 한다.”

○ 중산층의 상식 복원

- 미국의 기본 협약, 아메리칸 드림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고자 열망하는 모두를 위한

‘기회의 확대’이고, 정부는 중산층의 상식을 대변할 것임을 주장

- “이 나라를 건설했던 기본 협약, 즉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면, 출신과 피부색과 성적 취향과 무관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이상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완의 과제이다.”
- “정부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대변하고, 자유기업을 장려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보상하고, 이 위대한 나라의 모든 어린이에게 기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미완의 과제이다.”

2. 국민통합

○ 초당적 문제해결의 정치

- 문제를 야기하는 격돌정치가 아니라 초당적 문제해결을 위한 타협의 정치를 지향

- 오바마는 케네디 대통령의 연두교서의 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국민통합을 강조. “헌법은 우리가 권력쟁취의 라이벌이 아니라 진보를 위한 파트너로 규정한다. 국가 통합 상황(the State of the Union)을 보고하는 것은 나의 과제이고 통합 상황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 “국민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은 의회가 모든 이슈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은 가능하면 합리적인 타협을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한다. 미국은 오직 함께 할 때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통합을 향상시키는 책임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복장을 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동일한 명칭을 공유한다. 우리는 시민이다. ... 이는 우리가 믿는 것을 지칭한다. 우리가 서로와 미래세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받아들일 때만 이 나라는 작동한다는 지속적 이상이다.”

- 미국의 가장 긴급한 현안인 재정적자 감축에 대해 오바마는 1조 달러의 예산을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방안(sequester)을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사회보장을 파괴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에 타격을 주는 그릇된 아이디어로 비판

-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초당적인 종합적 조세개혁과 함께 예산삭감만이 아니라 동반성장에 투자하는 현명한 정부가 될 것임을 다짐

-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인은 예산삭감만으로 번영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국민은 동반성장이 지출삭감과 함께 모두가 공정한 몫을 함께하는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정치는 양당에게 모두 어려운 것이다.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것을 100퍼센트 얻을 수 없다. 당리당락을 버리고 무모한 긴축을 현명한 절약과 미래에 대한 지혜로운 투자로 대체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소비자와 투자자를 두렵게 하는 벼랑끝 전술 없이 이를 하자. 우리가 자초한 위기를 또 자초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는 지속될 수 없다.”
- “내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단 한푼도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큰 정부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동반성장(broad-based growth)에 투자하는 더 현명한 정부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초당적인 종합적 조세개혁이다.”

II. 중산층강국 재건을 위한 정책방향

1. 일자리

- “어떻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을 새로운 일자리와 제조업의 자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① 제조업

- 하이테크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세대 제조업혁명을 위해 국방부, 에너지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제조업 혁신 연구소(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확대
- 생명공학 등 최선의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② 에너지

- 천연가스, 재생가능에너지, 풍력, 태양열 등 클린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일뿐 아니라 차세대 성장동력. 기후변화에 대한 초당적이고 시장친화적인 해법을 촉구
- 국유지의 석유·천연가스 개발 이익을 석유가 필요 없는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에너지안보기금(Energy Security Trust)’에 출연
- 다음 20년간 가정과 기업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제안

③ 기반시설

- 고속철도, 초고속 인터넷망, 최첨단 학교·전력망 등을 구축하여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을 제안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긴급한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우선수리 프로그램(Fix-It-First program)’ 제안
-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과 함께 하는 ‘미국재건파트너십(Partnership to Rebuild America)’ 제안

④ 주택

- 높은 이자의 모기지로 고통받는, 책임있는 주택구입자에게 현재 금리로 재융자해줌으로써 연3천달러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

2. 교육·훈련

- “어떻게 국민이 일자리에 필요한 숙련을 준비할 수 있는가? ... 우리의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은 오늘날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열심히 일하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① 보육

-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을 미국 전체로 확대

② 고등학교

- 독일식 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컴퓨터 등 자격증과 연계
- 대학·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과학·기술·공학·수학 반을 신설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③ 대학

- 교육의 질과 함께 학비인하 노력을 정부지원의 기준으로 삼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

3. 근로에 대한 보상

- “어떻게 열심히 일하면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 미국은 탄생 또는 상황의 기회가 운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 이것이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모두에게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의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① 이민법 개혁

- 오바마는 이민자의 재능과 창의력을 활용해야 미국 경제가 강해진다는 것을 강조
- 진정한 이민법 개혁은 강력한 국경통제, 책임있는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고숙련 이민자에 대한 합법적인 이민기회 허용임

②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생활비용과 연계. 오바마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빈민층의 사활적 요구이자 기업에게도 이득이 되는 새로운 수요의 창출임을 강조

- “정직한 임금으로 정직한 노동을 보상할 때, 우리 경제는 더 강하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어떤 사람도 빈곤해서는 안 된다.”

※ 외교정책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경고

- “북한체제는 국제적 의무에 부응함으로써만 안전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제 밤과 같은 도발은 고립만을 심화시킨다.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이 위험에 대응할 굳건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세계를 지도할 것이다.”

Ⅲ. 2013년 연두교서의 맥락

1. 오바마의 2012년 대선 메시지

○ 문제는 중산층이야. 바보야!

-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연두교서는 오바마의 승리를 이끌었던 중산층 메시지, ‘문제는 중산층이야. 바보야!(It's Middle Class. Stupid!)’를 다시 확인
- 오바마는 2012년 대선을 ‘중산층의 미래에 대한 선거’, ‘중산층의 나라인지에 대한 국민투표’로 규정하고, 공화당을 ‘시대착오의 정당’,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정당’으로 낙인 찍음
-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산층 메시지는 공화당을 결정적으로 격퇴시켰던 메시지. 오바마는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중산층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중산층의 상식’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과 ‘공정성’의 중산층 스토리를 일관되게 설파

○ 중산층의 상식

- “근로가 보상받고 책임이 존중받고 우리의 자녀가 이 가치가 살아숨쉬는 나라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 “동반번영은 부유한 소수의 성공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중산층의 중심으로부터 자라나온다.”

○ 중산층/새로운 정책 메시지

- “이번 대선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모두의 성패가 달린 순간이다. 일하는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고 얼마간 저축하고 집을 갖고 안전한 은퇴를 위해 충분히 벌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산층을 위해 감세하고 혁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돕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공약한다.”

○ 중산층/공정성 메시지

- “이번 대선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모두의 성패가 달린 순간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고 얼마간 저축하고 집을 갖고 안전한 은퇴를 위해 충분히 벌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공정한 몫을 얻고 모두가 공정한 역할을 하고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킬 때, 성공한다. 따라서 워런 버핏과 같은 억만장자가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계급전쟁이 아니라 상식이다.”

2. 오바마의 ‘타협의 정치’

○ 담대한 타협

-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은 ‘담대한 타협의 정치’. 오바마는 야당 시절부터 국민의 불신만 증폭해왔던 격돌정치 속에서 고정관념을 벗어던진 초당적 문제해결의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었음

○ 타협의 정치

- 가령, ‘테러와의 전쟁’은 공화당의 필승카드이자 좌우파의 극단적 국론분열 이슈였음. 오바마는 ‘강하면서 동시에 현명한(strong and smart)’ 중도적 해법을 제시하여 ‘테러와의 전쟁’ 이슈에서 공화당의 우위를 무력화시킴. 오바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 이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오사마 빈라덴과 알 케이다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이라크에서 책임있는 철군과 아프가니스탄으로 미군의 증원을 주장. 좌파의 이라크전 반대와 우파의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동시에 만족시킴

○ 담대한 희망

- “(W.부시 집권이후) 민주당은 반응의 정당(the party of reaction)이 되었다. ... 더 침예한 당파적, 이데올로기적 전략을 추구하려는 민주당의 어떠한 시도도 현재의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우리가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우리의 대의를 과장할 때마다 패배한다고 생각한다. 이데올로기적 순수성, 경직된 정설, 정치적 논쟁의 뻔한 예측성 때문에 한 국가로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자택일의 사고에 빠지는 것이다. 국민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교조적 사고와 노골적인 당쟁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광범한 다수, 즉 선의를 가진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층이 국가혁신 프로젝트에 다시 함께하는 것이다. 국민은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도그마와 상식, 책임과 무책임, 지속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 간의 차이는 알고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